



산업재해로 인한 재무RISK,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 Risk관리를 위한 가치 제안서

기업 Risk Management Partner 삼성생명 GFC

매일경제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A05면 종합

대기업 겨냥한 중대재해처벌법, 中企만 잡는다

경기도 화성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사내 변호사 한 명을 고용했다. 가뜰이나 장남에게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선 요건이 까다로워 법적 자문이 필요했는데 산업재해 관련 법안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자 언제는 벌어질 수 있는 송사에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서 지키라는 게 수백~수천 가지인데 대기업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지, 일단 벌금부터 때린다고 하니 소송 준비라도 잘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근로자를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겠다며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오히려 본래 단속 목표였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데다 새로 제정된 법안들이 예방보다는 징벌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산재사망 94%가 중기서 발생 근로자 사망때 벌금 최소 6억 중기 1년 매출 넘어서는 금액

현재 여당이 산재를 근절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정의당 주도로 발의됐지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중대재해법)'과 같은 당 박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두 법안의 특징은 모두 기존에 있던 산안법보다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는 점이다. 일례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에 의해 유죄 인정을 받으면 그 회사는 경영주가 최소 5억원, 회사가 최소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해당 회사가 올리는 매출액에서 최대 10%까지를 추가로 내도록 돼 있다. 중대재해법에 의해 벌금을 6억원 이상 내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여당이 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법안 처벌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업주 처벌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 50% 가중) -상해 처벌 규정 없음	-사망: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위험방지의무 소홀 땀 5년 이상 징역) -사망 제외 중대재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
법인 처벌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처벌 규정 없음	-사망·상해: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가중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 제재 병과 피해자 손해액 5배 이상 배상책임 (증명책임 사업주에 부과)

6억원은 일반 중소기업의 1년 매출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연매출 평균은 4억110만원이다. 만약 여기에 산안법 개정안도 통과되고 사망자가 세명 이상이었다면 벌금과 별도로 100억원 이하 과징금도 내야 한다.

이 같은 높은 징벌 규정은 산재 사고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855명 중 94.4%인 807명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77.2%인 660명은 5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망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관련법이 중소

기업 폐업을 부추기는 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은 2007년 제정된 이후 10년간 26개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전부 중소기업이었다"며 "이 중 절반을 넘어서는 기업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들 26개 영국 중소기업이 부과받은 벌금의 평균액은 33만8654파운드(약 5억원)로 한국에서 논의 중인 규제 수준보다 약하다.

조성호 기자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시행일 : '22.1.27 (50인 미만 사업장 등 '24.1.27.)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½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당사의 보험을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벌금'에 대한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B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스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재무 RISK 증가

준법감시필 23-0391 (GFC사업부, 2023.02.28~2024.02.27)

“ 산재보험금 만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지급보상금 부족 ”

민사소송 제기시 기업은 큰 경제적 부담 발생(사망時)

산재보험금	유족급여	13,000만	14,208만
	장의비	1,208만	
민사배상금	일실수입	35,883만	46,611만
	일실퇴직금	1,928만	
	위자료	8,800만	

※ 기준 : 남 30세, 월급여 300만원, 정년 60세, 본인과실 20%, 가동연한 65세

3급 장해시

산재보험금	11,550만
민사배상금	65,517만

※ 3급 장해시 산재보험 장해급여 - 1,155일분

7급 장해시

산재보험금	6,160만
민사배상금	39,310만

※ 7급 장해시 산재보험 장해급여 - 616일분

※ 민사배상금 계산방법

일실 수입	정년 前	평균임금 × 정년잔여년수의 호프만 계수 × 사업주 과실률 × 노동능력 상실률(사망시 2/3)
	정년 後	도시일용노임 × 22일 × (65세 - 정년) × 호프만 계수 × 사업주 과실률 × 노동능력 상실률
일실 퇴직금		[(평균임금 × 정년잔여년수) ÷ (1+5%×정년잔여년수)] × 사업주과실률 ×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		1억원 × (1 - 본인과실률 × 6/10) × 노동능력 상실률(사망시 100%)
비고		2022년 중반기 도시일용노임 : 148,510원



필요자금 **4.7** 억원

—



준비자금 **1.4** 억원

※ 산재보험금

=



부족자금 **3.3** 억원

※ 기업주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상금액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8다248909]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단순예시로 실제 금액 및 산출식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기업의 추가 배상금에 대한 Risk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기준 : 남 30세, 월급여 300만원, 정년 60세, 본인과실 20%, 가동연한 65세



※ 기업주의 과실(안전배려의무 위반)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상금액은 기존 판례[대법원 2018다248909]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 단순예시로 실제 금액 및 산출식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수익자=회사가 되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결론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時,
대표님께서서는 막대한 **민사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함께 해결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한
민사 배상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 배상금

※ 민사 배상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법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피해자나 상속인에게 손해액을 배상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의 중대사고의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

“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 및 이에 대비한 **보험**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 감경 가능여부는 법리해석을 통한 개별 판단 사안임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3.1 시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 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보험 가입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삼성 기업재해 보장보험(2301)(무배당)의 주요특징

준법감시필 23-0391 (GFC사업부, 2023.02.28~2024.02.27)

1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 보장

2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도 변동 없는 보험료

※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해약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험 가입시 보험료 변동가능

3

산재보험과 다르게 만기시 환급금을 통한 기업 운영자금 확보 가능

※ 만기 환급형 가입시 限

4

퇴직, 이직 등을 고려한 자유로운 피보험자 변경

※ 피보험자 변경 : 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②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주보험 및 해당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남녀간 변경 또는 질병특약의 경우 보험료 변동가능)

5

종업원 복리 후생비 처리로 비용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 단, 수익자 = 종업원(그의 배우자/가족)인 경우 限

※ 손비처리 등 세제혜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기업재해 보장보험(2301)(무배당) 설계 모델(샘플)

준법감시필 23-0391 (GFC사업부, 2023.02.28~2024.02.27)

본 자료는 상품설명서 일부가 출력된 재안용 문서로,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청약서 번호'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로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성
기업재해보장보험(2301)(무배당)

보장내용 예시

주요 보장금액 요약

※ 1인기준 : 남, 45세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님 기업의 Risk를 삼성생명과 함께 준비하십시오				
구분				지급금액
일반재해	사망			20,000만원
	장해	80% 이상 장해상태시	총 보험금	80% 장해 30,000만원 ~ 100% 장해 33,000만원
			일시금	80% 장해 12,000만원 ~ 100% 장해 15,000만원
			매년	매년 900만원 X 20년
		80% 미만 장해상태시		1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사망			20,000만원
	장해	80% 이상 장해상태시	총 보험금	80% 장해 30,000만원 ~ 100% 장해 33,000만원
			일시금	80% 장해 12,000만원 ~ 100% 장해 15,000만원
			매년	매년 900만원 X 20년
		80% 미만 장해상태시		1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산업재해	사망			10,000만원
	장해			
재해치료	재해골절진단 (재해골절 발생 1회당, 치아의 파절 제외)			30만원
	5대재해골절진단(5대재해골절 발생 1회당) (비골의 골절 및 치아의 파절 제외)			20만원
	재해수술(재해수술 1회당)			100만원
	재해성형	현저한 추상	현저한추상: 300만원	
		추상	추상: 200만원	
	중화상진단(최초 1회한)			1,000만원
	김스치료(1회당)			10만원
	재해입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만원
	화상진단(심재성 2도 이상, 1년 1회한)			20만원

※ 상기 예시된 내용은 가입조건 01 기준의 주보험 및 일부 특약에 대해 요약한 것으로, 이외 보장내용 및 재해 정의 등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표의 일반재해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말합니다.
※ 상기 표의 총보험금은 일시금과 매년 지급금액을 단순합한 금액으로, 매년 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해당 특약의 적용이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년 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금액은 상기 표의 총보험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모델] 기업재해보장보험(2301)(무배당) 10년만기 10년납

※ 3급 중위험 단체 가정(45세, 남, 1명 기준)

※ 1종(재해사망보장형) 100% 환급형

- 주계약 2,000만
- 신상해보장특약E(무배당) 6,000만
- 신산업재해사망특약E(무배당) 10,000만
- 신상해장해연금G특약E(무배당) 3,000만
- 재해치료보장특약E(무배당) 1,000만
- 김스치료(부목제외) 특약E(무배당) 1,000만
- 신상해입원특약E(무배당) 3,000만
- 질병·재해수술특약E(무배당) 1,000만
- 화상진단(심재성 2도 이상) 특약E(무배당) 1,000만

※ 상기설계금액은 가입금액으로 지급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직업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초율(적용이율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이 보험의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됩니다.
- ※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전화를 통해 가입하는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계약은 45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인출 및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인출수수료 포함)"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해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samsunglife.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삼성생명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로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은 부여받지 않았으나 청약을 권유하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 설계를 위한 필요정보

준법감시필 23-0391 (GFC사업부, 2023.02.28~2024.02.27)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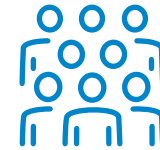
1



현재 재직 인원

(남성, 여성, 외국인,
61세이상)

2



4대보험
가입자 수

3

- ※ 상기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업체위험등급 및 보장금액에 대한 단체제안 설계가능 (업종에 따라 보험료, 가입한도 차등 적용)
- ※ 실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의서, 실제 임직원 명부(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삼성생명이 이룩한 업적

준법감시필 23-0391 (GFC사업부, 2023.02.28~2024.02.27)

279.1조원

총자산규모

(2022년 3분기,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실)

1,195만명

보험고객수

(2022년 기준, 삼성생명 CPC전략실)

3,422억원

월평균 지급보험금

(2022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1위

시장점유율 국내 생보업 1위

(2022년 3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협회)

236.19%

지급여력비율 RBC

(2022년 3분기, 생명보험협회 경영공시실)

80.2%

사고보험금 24시간 내 지급비율

(2022년 기준, 삼성생명 보험운영실)



국가고객만족도(NCSI)
생명보험부문 19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2004~2022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생명보험부문 20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선정) 2003~202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생명보험부문 18년 연속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2005~2022

AAA

보험금지급능력 신용등급

(2022년 기준, 한국신용평가)

1.5조원

ESG 연간 순증 투자

(2022년 기준, 삼성생명 소비자보호실)

96.4%

모바일 체결율(전속채널 기준)

(2022년 기준, 삼성생명 디지털혁신실)

